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









일 시 | 2011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 소 | 공주시청 대회의실(3층)

주 최 |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후 원 | 충남 6개시·군(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개 회 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시·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의장님, 한남대 정순오 교수님의 주재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6개 시·군 발전협의회 위원님과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강권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으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금강권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 간 효율적 연계·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강권은 세종시 입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포신도시 등과의 연계·협력은 물론 권내의 시·군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조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정부의 광역권개발정책에 대응한 지역의 개성과 비교우위를 앞세워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으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 지역발전토론회는 금강권의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금강권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5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고도! 5都2村 주말도시! 공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가 공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원장님,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해주실 김정연 박사님, 최인호 교수님, 토론을 진행해 주실 정순오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6개 시·군의 발전협의회 위원님과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강권 6개 시·군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 공생발전의 길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금강권 주민들에게는 아주 뜻 깊은 해로, 금강을 중심으로 공주보를 비롯하여 3개의 보와 자전거 도로가 완공됩니다.

보가 완공되면 금강을 중심으로 친수구역개발, 뱃길운행, 레저시설 확충 등 연계협력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4년에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개통되어 백제문화권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며, 인근 시·군과 시티투어버스 및 관광열차 운행, 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동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등산로 및 테마길 연결, 복지시설, 환경시설 등도 머리를 맞대면 협력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금강권 6개 시·군간에 공통 분모를 찾아 서로 상생하는 연계·협력사업들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한 금강권 6개 시·군은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고, 충청의 젖줄 금강이 흐르는 지역이며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권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과 인근 시·군간에 협력사업을 찾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제57회 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내 일원에서는 공주알밤축제, 공주 신상옥 청년국제영화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공주국제미술제 등이 동시에 열립니다.

백제의 고도! 5도2촌 주말도시! 공주에서 풍성한 가을의 향기를 체험해보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5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사말씀

4대강 중 금강 세종보가 지난 9월 24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사업추진 기간 동안,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왔던 지역정책의 큰 산이 새로운 역사가 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法)의 한자어를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만들어온 역사도 후손들이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세종보를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라는 생각을 하면 지역정책은 참으로 무겁고 엄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이란 단일 행정구역이 될 수도 있고, 인접 지역을 포괄하는 생활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인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지역을 보는 시각을 환경변화에 맞춘다면 지역의 개념은 매우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권의 유역은 상류로는 장수, 진안, 무주 등과 연결되고, 중류지역은 대전, 청주, 청원, 연기 등과 하류지역은 논산, 서천, 익산과 연계되는 광활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통근·통학권, 4대 개발계획권, 문화·관광계획권 등의 권역이 금강권을 대표하는 계획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강권은 지금까지는 낙후지역이었지만, 세종시 입지, 수도권의 광역권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남부경제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5도2촌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도시 사람들의 귀촌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귀촌이 귀농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모습의 귀촌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주말을 농촌지역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트타임 귀촌자인 셈입니다만 이런 모습도 앞으로는 귀촌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가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생활양식, 주민들이 생활상의 편의를 어디에서 추구하는가, 그리고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이웃 지역과의 의도적 협력활동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서 지역은 다양하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 지역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이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방식이 연계·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가 벅찬 일을 하고자 할 때,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 주민의 수요가 있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시설 활용의 효율성이 낮을 때, 제도적 한계에 갇혀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등 생활 현장에서 바꾸고 힘을 모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연계·협력 활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 군·특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서 장려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일이 왜 필요한 지를 느껴야 합니다.

연계·협력 사업이란 공무원의 열정과 서비스의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민 생활의 불편함은 사례마다 영역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불편함과 수요를 찾아내고 다양한 크기와 방식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추진되는 연계·협력 정책을 보면 정부 주도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형 연계·협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직 연계·협력 사업 초기여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연계·협력 활동이 왜 필요한지, 개념은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소양을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력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경쟁이 기본이 되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혼자서는 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시대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계·협력 활동을 통해 주어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앞으로의 행정에서 필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금강권의 시·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계·협력 활동이 시민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풍족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홍 철

행 | 사 | 일 | 정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5	등 록
14:05~14:20	개회식 <input type="checkbox"/> 개회사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input type="checkbox"/> 축 사 : 이준원 공주시장
14:20~14:50	인사말씀 및 기조강연 <input type="checkbox"/> 지역발전의 새 지평, 연계·협력이 공생의 길이다 (홍 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4:50~15:40	주제발표 <input type="checkbox"/> 금강권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2명) <input type="checkbox"/>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연계발전 전략 (최인호 청운대학교 교수)
15:40~15:50	중간휴식
15:50~17:30	종합토론 좌장 : 정순오 (한남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input type="checkbox"/> 김혜천 (목원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박노찬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성태규 (충발연 연구실장) <input type="checkbox"/> 유영호 (청양군의회회장) <input type="checkbox"/> 이재영 (지역위 연계·협력국장) <input type="checkbox"/> 임화빈 (부여군의회 운영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정환영 (공주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조성남 (중도일보 주필) <input type="checkbox"/> 지진호 (건양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토론자는 가나다순
17:30~	폐 회

목 | 차

I . 지역발전의 새 지평, 연계·협력이 공생의 길이다	▶▶▶ 1
1.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변천	
2.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3.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	
4. 지역발전과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II . 금강권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 21
1. 지역간 연계·협력의 의의	
2. 지역간 연계·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3.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협력 추진 사례	
4. 금강권의 연계·협력방향과 정책과제	
5.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III .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연계발전 전략	▶▶▶ 43
1. 연계전략 이해	
2. 관광여건 분석	
3. 연계전략 구상	
4. 추진 전략산업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

지역발전의 새 지평, 연계·협력이 공생의 길이다

지역발전위원회 홍 철 위원장

01

지역발전의 새 지평, 연계·협력이 공생의 길이다

지역발전위원회 홍 철 위원장

1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변천

□ 1960~80년대: 산업화 시대

- 기간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산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
 - 울산(자동차, 조선), 창원(기계), 포항(철강), 여천(석유화학), 구미(전자), 거제(조선) 등 산업도시 건설
 - 1인당 국민소득(GNI): ('60년) 155달러 → ('80년) 1,599달러 → (2000년) 10,890달러
- 아울러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진행
 - 도시화율: ('60년) 39.1% → ('70년) 50.1% → ('80년) 68.7% → ('90년) 81.9%

□ 1990년대: 세계화 시대

-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 속에 IT 등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
 - 인구, 산업, 금융, 교육, 의료,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인구의 49.2%, 금융(대출)의 72%, 공공기관의 84% 수도권 집중)

□ 2000년대: 지식기반 시대

- 지식과 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역정책의 필요성 대두
 -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 증가

<주요 국가의 지역정책 동향>

□ 광역경제권 도입은 세계적 추세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내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
- 주요국은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인식**
 - * 대도시(편대장) + 중소도시 + 농촌도시 → 기러기 편대 형성
 - ** 마이클 포터(하버드大) 교수는 Megacity Region(뉴욕권, 런던권, 도쿄권 등)이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되고 있음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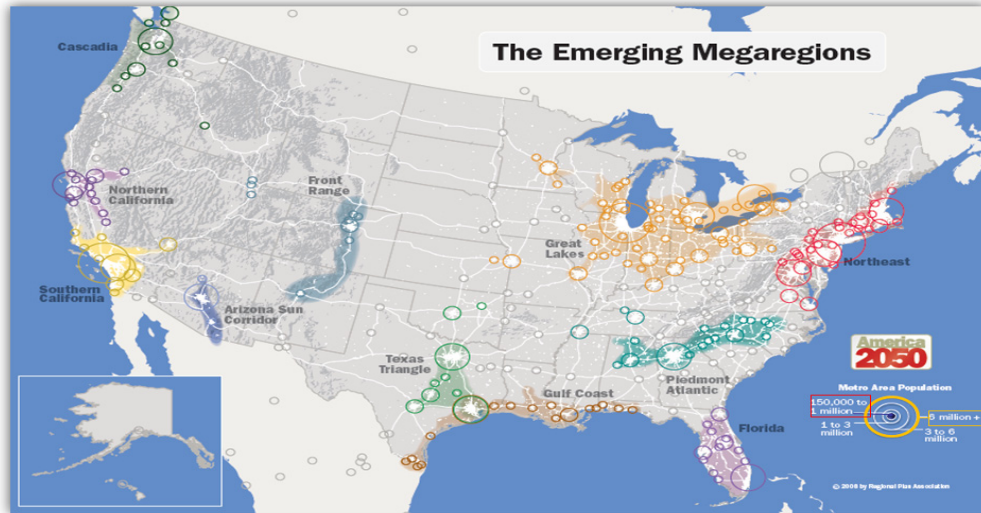
□ 프랑스

- '60년대 이후 수도권(파리)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만 초래
- 이후 분권 정책, 광역권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헌법을 개정('03년)하여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제1조)
 - 22개 광역경제권을 6개의 초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는 방안 논의 중
 -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추진('09. 4.29 최종안 발표)
 - * 파리수도권의 미래비전, 발전전략, 거버넌스 개편 및 총 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제시

□ 미국

-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의 메가 리전(Mega Region)을 육성하고 고속철도를 통해 권역간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

< 미국의 광역경제권(American 2050 전략) >



* 자료: Regional Plan Association, 2006.

□ 동북아 국가

- 중국: 주장삼각주(선전, 홍콩), 창장삼각주(상하이, 난징), 징진지(베이징, 톈진)의 3개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국가발전을 선도
- 일본: 현재 8개 광역지방계획권 정책(국토형성계획법 근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위해 1개 초광역경제권* 구상

* 수도권(도쿄)~추부권(나고야)~긴키권(오사카)를 리니어 신칸센으로 연결

< 중국 및 일본의 광역경제권 >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기본방향

□ 세계적 추세에 따라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 중

○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기존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5개 광역권) + 강원권, 제주권(특별 광역권)

* 광역경제권 정책이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도시가 하나의 편대를 형성, 도시간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 광역경제권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병행 추진

- 기초생활권 정책 :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적 삶의 질 보장에 중점

- 초광역개발권 정책 :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과 개방형 국토운영에 초점



- 광역화, 특성화, 분권화, 상생발전이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패러다임 전환

행정구역 단위 투자	⇒	광역화(규모의 경제)
획일적 개발		특성화(선택과 집중)
중앙정부 주도		분권화(지자체 중심)
대립 및 갈등		상생발전(연계·협력)

2. 주요 추진사업

(1) 광역경제권 기반 확립

□ 선도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2개 선도산업(권역별 2개) 및 20개 프로젝트를 선정, 중점 육성(1단계 : '09~'11년)
 - 총 9,162억원 지원('09년 2,017 → '10년 3,295 → '11년 3,850억원)
 - 기업(683개),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1,040개 기관 참여
 - 지난 1년 6개월간('09. 7~'10.12) 매출 2.3조원, 수출 10.4억불, 고용 창출 5.5천명, 투자 유치 1.6억불 등

□ 인재양성사업 추진

- 전국 20개 대학(21개 센터)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1단계 : '09~'11년)
 - 총 3,020억원 지원('09년 1,000 → '10년 1,020 → '11년 1,000억원, 대학당 연간 약 50억원 수준)

- 지난 1년 6개월간('09. 6~'10.12) 기업맞춤형 강좌 개설 1,160건, 산학공동 연구과제 수행 659건, 우수인재 양성 29천명 등

☐ 30대 선도프로젝트 착수

- 광역경제권 발전 및 상호 연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SOC(도로, 철도 등) 구축, 문화권 정비 등 추진
- '09~'13년간 총 50조원 투입 계획으로, 현재 대부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 중
- * 예) 원주-강릉 철도, 호남고속철도, 동서 5축·8축 고속도로 등

(2)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신설('10. 1. 1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하여 지방재원 확대에 기여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을 통해 10년간('10~'19년) 총 3조원의 재원을 지방의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활용

*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중 매년 3,000억원 출연

- ☐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여개 국고보조사업을 22개 내역사업*으로 통·폐합,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

(3) 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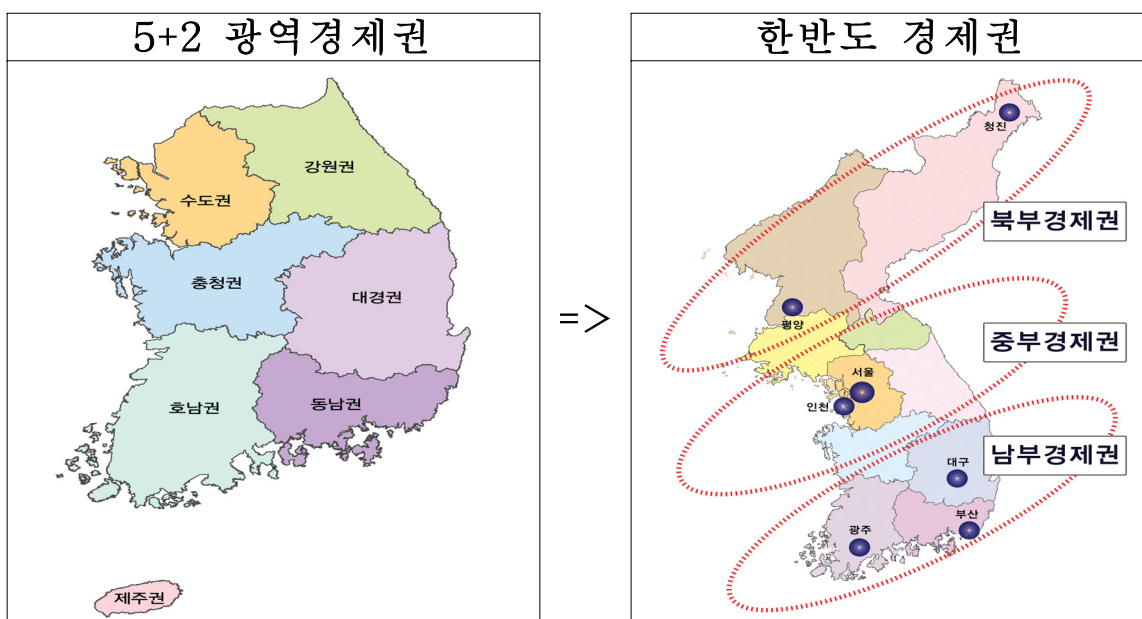
- ☐ 우리 국토의 강산개조를 위해 4대강 본류는 금년도 완공 예정
- '11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공정률은 81.4% (170개 공구 중 16개 완료, 153개 공사 진행 중)
- 4대강 사업을 각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 * 한강(수도권, 충청권), 낙동강(대경권, 동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4) 각종 국책사업 추진

-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 15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54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
 - 현재 부지 매입(95개), 청사 설계(107개), 공사중(17개) 등 기관별로 추진 중
-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의료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신서(대구), 오송(충북)의 2개 단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 확정('10.1)
- ☐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3개) :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5개) : 구미, 포항, 광주·전남, 대구, 장항

3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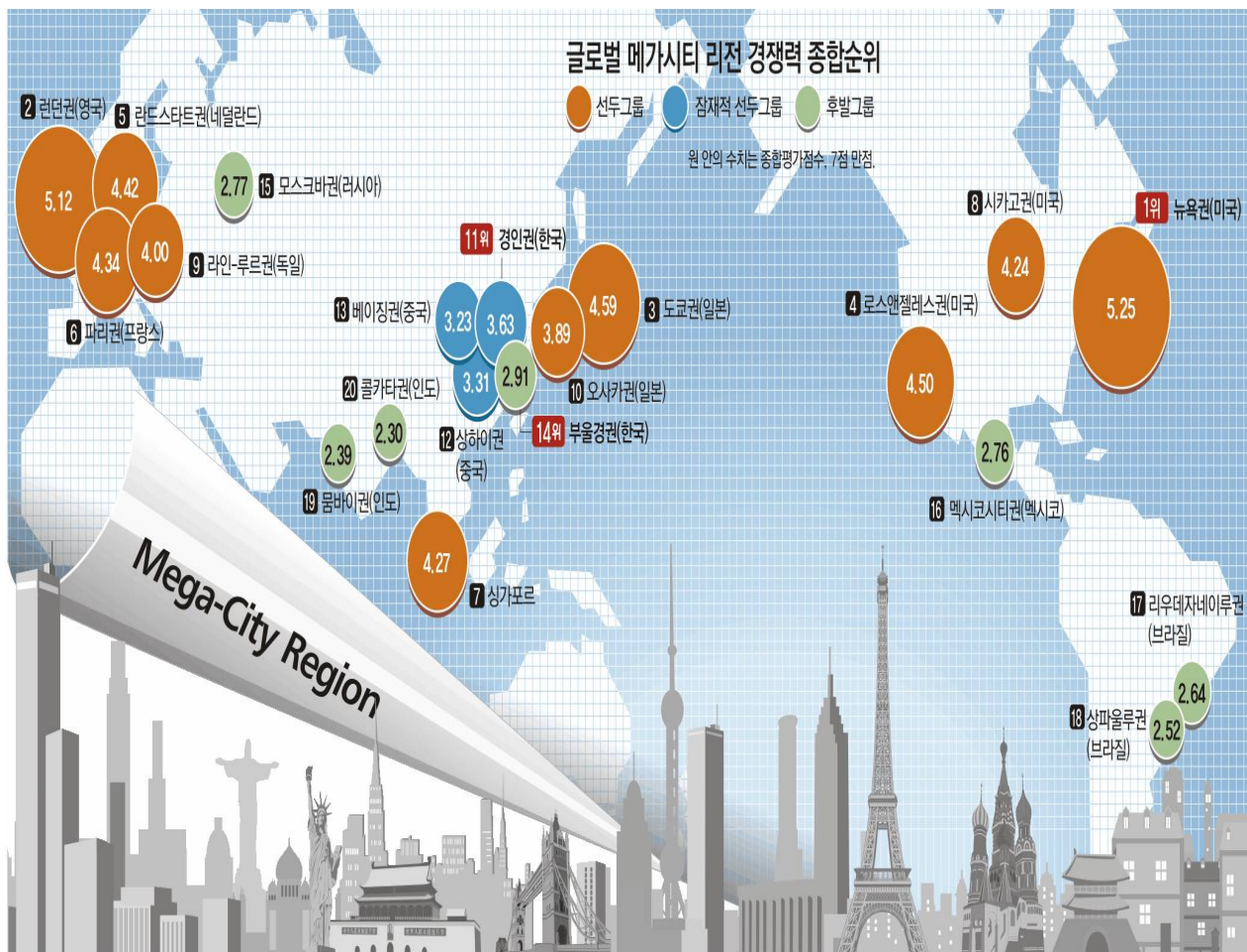
- 선진국의 거대 광역경제권과 경쟁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정책의 전환 필요
 - 글로벌 광역경제권은 최소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 행정단위의 단순결합이 아닌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공간단위
- 현재의 5+2 광역경제권을 토대로 시장기능에 의한 권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합을 추진하여 공간적 영역을 확대
 - 5+2 광역경제권 => 3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육성
 - 중부경제권: 수도권+충청권+강원권 →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
 - 남부경제권: 호남권+대경권+동남권 → 동북아 속의 광역경제권
 - 제주특별경제권: 제주권 → 아·태지역의 관광·휴양·건강 허브
 - 통일시대 : 북부경제권(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경제권 구축



<국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 국내 5+2 광역경제권은 도입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
 - '09년 동아일보와 모니터그룹이 전 세계의 20개 광역경제권(MCR)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11위, 동남권 14위. 일본의 도쿄권 3위, 오사카권 10위
-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등 글로벌 광역경제권 육성 필요

< MCR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



□ 중부경제권의 발전전략

○ 발전비전: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

○ 발전전략

- 현황

- 2000년대에 들어 남부경제권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
- 수도권에 산업 기능이 충청도 및 강원도로 확산되고 KTX, 경춘 고속도로 등을 통해 단일 생활권을 형성 중
- 중부경제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발전 중

- 발전전략

- 서울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주력, 중부경제권의 메가시티 역할을 수행
- 인천은 인천공항, 인천항, 송도 등을 토대로 중부경제권 관문도시로 육성
- 대전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으로서 R&D 중심지로 역할 수행
- 경기도와 충청도는 지식기반제조업 육성에 주력
-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연계하여 관광, 의료융합 등 생명건강산업으로 특화 발전

□ 남부경제권의 발전전략

○ 발전비전: 동북아 속의 광역경제권

○ 발전전략

- 현황

- 남부경제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 활력이 감소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 대도시는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KTX 빨대 효과로 인해 인근의 중소도시들은 서울과 직접 교류
- 울산, 창원, 포항, 구미, 광양 등 산업도시는 주력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 중소도시에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도시기능이 취약해진 상태
- 읍·면 농촌지역은 경제 기능을 상실하고 노인들만의 거주공간으로 전락

– 발전전략

- 남부경제권을 살리기 위한 기본방향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고용창출과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에 있음
- 우선,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육성하여 거점도시 기능을 회복
- 둘째, R&D 기능 강화로 산업도시 소재 대기업 경쟁력 제고와 첨단화 추진
- 셋째, 지역 중소기업에 현장 기술과 기능 인력을 제공, 첨단부품·소재 분야의 강소형 기업을 육성하고 중국 제조업체의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
- 넷째, 남부경제권 내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목포권, 광양만권, 새만금권 등 5개 소경제권을 육성

4 지역발전과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역, 지역발전의 이해

○ 지역과 지역발전

- 지역은 유·무형의 자원, 환경,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 공간(area)으로서의 지역은 특정한 범위와 영역, 장소(local)로서의 지역은 구체적인 현상, 혹은 중앙의 대척점(지방)
- 지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사는 공간”, 지역발전은 “사람의 삶을 행복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트렌드는 물질과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화
- 지역은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으로서 연계·협력활동을 추구하면서 정보화, 네트워크화의 기지가 되면서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

○ 지역정책의 두 관점

-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역적인(local) 것의 중요한 가치가 상실되고 있음. 다양한 인류문화의 생성·교류·변동하는 장으로서의 지역 인식 필요
- 산업화 시기에는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 추구하면서 새로운 개발공간의 창출, 생산의 집적, 규모의 역할 수행
- 경제 위기 이후에는 사람의 번영(People's Prosperity) 추구하는 지식 기반시대로 전환되면서 지역은 사람, 지식, 정보공간으로서 소프트, 네트워크화의 역할 수행

□ 연계·협력은 지역발전의 핵심 고리

○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개념

- 경제의 글로벌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확대: 광역행정 및 서비스 수요의 광역화 추세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간 개발 경합 및 분쟁 확대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주민서비스의 질적 하락
- 광역경제권 정책 도입으로 중앙 및 지방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운용 필요성 증대
- 연계·협력이란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자원, 역량을 동원하여 공생 발전을 추구하는 것
- 연계·협력의 조건: 둘 이상의 지역 참여(영국의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인 LEP에는 기업도 참여), 공동의 목적 추구(재원 절감, 효율 향상), 재원의 분담, 편익의 창출 및 분배

○ 연계·협력 지원법 및 촉진제도

- 국토기본법(제3조 제3항) 지역 간 교류협력 촉진 및 지원, 지역 간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
- 군특법(제10조 제1항) 지역발전투자협력 체결, (제39조 제2항 제1호) 둘 이상 지자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공동 추진
- 지방자치법(제8장) 협력과 분쟁 조정,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자체 조합, 지자체장 협의체
- (차등지원제도 시행) 광특회계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평가항목은 광특회계 운영성과, 지역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 등

○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영역

- 연계·협력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추진 가능: 환경, 문화·관광, 교통 및 도시개발, 보건·복지, 산업기술, 교육 등
- 특히 사업비 분담, 광역화로 개별 추진보다 효과가 큰 사업 중시: 주민 공동이동 단일 시설사업, 사업규모가 커서 개별지자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지자체 간의 특성화 보완이 필요한 사업

○ 연계·협력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 지역 간 중복투자 및 소모적인 경쟁 방지
- 지역 간 분절화된 사업추진 방지 및 종합적·체계적 사업 추진
- 자원 부족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운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 가능
- 연계·협력적 사업추진은 부족한 발전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광역적 행정사무의 공동 대응, 공동시설의 활용도 제고, 지역이기주의 및 지역갈등 문제 해소에 기여

□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사업

- 해안권에서는 5개 시범사업*('11년 60억)을 시행 중이며, 접경지역에서는 평화누리길 사업('11년 88억)을 추진
 - * 섬진강 테마로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동서화합 연안벚길, 해안마을 미관 개선,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
- '12년부터 내륙권 및 접경지역에서 추가 사업 시행예정
 - * 동서녹색 평화도로 건설, 백두대간 마루금 단절도로 복원, 내륙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분절적 지역사업을 지양하고 시·도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0년부터 사업 추진
 - * '10년 30개 사업 540억원, '11년 46개(신규 16개 포함) 사업, 1,000억원
- 산업 R&D 위주의 대상사업을 농림·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등 '12년 신규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

○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 ~2011년 42개 시·군·구, 10개 사업 추진(국비 83억원): 사과 공동가공 제품화 및 농기업 창업 보육(영월, 봉화, 영양, 청송) 등
- 2012년 19개 시·군·구, 4개 사업 선정: 남중권 농산어촌 생태문화관광 연계(고흥, 보성, 하동, 남해 등 9개 시·군) 등

- 연계·협력사업 시행 초기로 지자체 이해도, 기획 능력 부족으로 사업 발굴 저조 및 다양한 사업모델 제시 미흡

○ 지자체가 연계·협력사업을 보는 시각

- 사업에 대한 기초 이해 부족: 사업의 개념, 필요성 등 연계·협력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상태, 현행 제도에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
- 연계·협력사업을 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 10%의 국비 보조율 인센티브가 있으나, 지자체 광특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실익이 없고,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심각한 페널티가 없음.
- 인근 지자체와 공동사업의 기획, 추진에 따른 어려움: 제도화 미비로 단체장의 의지, 담당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

○ 유럽의 연계·협력 정책

- (EU의 연계협력 정책) Interreg IV(Interreg Community Initiative IV): 협력유형은 국경지역(A), 국가 간(B), 지역 간 협력(C)로 구분, 재원은 유럽지역개발기금 조성('07~'13년 28.9억 유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사업 선정
- (영국의 신지역개발정책)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2011년 지역개발청(RDA)가 지방산업협의회(LEP)로 전환, 2011년 기준 36개 LEP 승인(62개 LEP 제안서 제출)되어 잉글랜드 지역의 97%가 LEP에 참여
- LEP는 지방산업계가 주도적 역할 수행: 지방정부, 산업계 협력기구(거버넌스)
- LEP 간 공동제안사업: 강력한 재정인센티브 제도 시행 계획

※ RDA와 LEP 비교

- (LEP의 운영구조) 운영위원회의 50%가 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LEP의 의장은 기업인이 맡도록 하고 있음.
- (LEP의 기능) 권역계획, 주택, 지방교통, SOC, 고용 증진,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저탄소녹색성장, 관광, 도시재생 등
- 기존 RDA의 기능은 LEP와 중앙정부 주도 기능으로 전환

구분	RDA	LEP
구역	잉글랜드 9개 지역: 5+2광역경제권과 유사	통근권 중심, 3~4개 시·군 통합
지배구조 (거버넌스)	운영위, 지역위 위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	운영위 위원의 50% 이상 기업인 의무화, 기업인이 의장
재원	중앙부처(6개) 예산 → 포괄보조금으로 RDA 배정	LEP 신청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역성장기금에서 예산 배정
기능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 포괄적 지역개발 가능	기존 RDA기능 중 해외투자유치, 국제무역, 혁신, 기업투자지원 등은 중앙정부 기능으로 전환

□ 공생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 지금까지의 연계·협력 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적 측면) 별도 예산이 없고, 지자체 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유인책이 거의 없음
- (사업성 의문) 사업설계부터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제안: 사업의 실효성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무리한 확대 추진시 부실화 우려
- (무늬만 연계·협력) 인접 지역에 두 개의 유사사업 동시 추진과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도 있음.
-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역 간 연계·협력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

○ 연계·협력의 두 가지 길: 글로벌화와 지역화

- (글로벌형 연계·협력) 유럽의 Interreg IV에서 국경지역(A), 국가 간(B) 협력 활동

- 영국의 RDA, 미국의 Mega Region(11개), 일본의 초광역경제권(1개)
- 우리나라의 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협력
- (지역형 연계·협력) 영국의 LEP(36개 승인, 향후 추가 승인 계획), 우리나라의 기초생활권이 지역형에 해당되는데 2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기능별, 행정단위로 다양한 모델 개발 가능
- 지역화의 길에서 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연계·협력 방향 모색 필요

○ 지역이 공생발전의 기초 단위

- (21세기의 지역은 공유와 협동의 공간) 소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협동소비 개념의 부상, 공동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자원 공유 공동체가 활성화될 전망(생태마을, 협동조합, 국제적 커뮤니티 확산)
-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오고, 지역에서 공생, 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
- * 레이철 보츠먼·루 로저스 공저,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

○ 연계·협력의 새로운 방향

-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연계·협력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수단이, 공생 발전의 실현 수단이란 인식 제고가 전제
- (연계·협력에 대한 이해 확대) 교육, 토론회 개최
- (연계협력 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단위사업 모델 개발 등
- (재원 확보 및 관련 제도 보완) 법령 제·개정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

금강권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

02

금강권의 연계 ·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2011. 10

김정연 · 한상욱 ·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 발 표 순 서

-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의의
-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 III.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 IV. 금강권의 연계 · 협력 방향과 정책과제
- V.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제언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의의

1.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필요성

- 교통,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역간 인적 · 물적 교류 및 상호작용 증가, 생활권 및 경제권의 광역화로 지역간 협력 필요성 증대
- 지방에서 일정수준 이상 인구감소 지속시, 극복 방안으로 도시서비스 공급 범역의 광역화 및 중심지간 기능분담 및 연계 필요
 - 고차서비스 기능의 이탈로 생활서비스의 질 저하 등
- 세계화 경제시대에 각국은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간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 MB정부도 지자체간 협력을 전제로하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지역발전전략을 추진
 - 신지역발전정책 :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에서 지자체간 협력 전제
- 그러나 지자체들은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이 고착화되어 지역간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 협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임

page 3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의의

2. 지역간 연계 · 협력의 개념

- 협력은 어느 일방의 편파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이 아닌, 협력당사자가 대등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표환 외, 2002)
- 연계협력은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교환 및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 둘이상의 지자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자원과 역량의 동원·활용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송우경, 2008)
 - 지역간 공동목표 성취를 위한 긴밀한 관계로서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지역의 업무·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권한, 역할을 교환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오은주·김현호, 2008)
- 지자체간 협력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 ·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향유하는 속성을 지님

page 4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의의

3.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효과

- **공공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제고**
 - 사업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
 - 특히, 지역발전 및 서비스의 공동생산 및 결합생산을 통해 분산투자로 인한 비용을 절감
 -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개별 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시설의 유향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공동이용을 통한 활용도 극대화
- **지역간 보완관계를 통한 추가이익의 시너지(synergy) 창출**
 -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지자체 상호간 비교우위를 살리고, 부족한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결합이익을 통한 상생발전 가능
 - 과소 및 중복생산 등을 발생시키지만 단독생산이 어려운 지역갈등 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참여에 따른 시너지 창출
-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지도적 역량(competence) 증대**
 -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임계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

page 5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1.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제도

- **국토기본법**
 - 교류협력, 공동번영 : 국가·지자체는 교류협력 촉진, 공동번영 도모(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투자협약(20조) : 지역발전 공동사업 추진 협약체결(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공동사업), 협약 내용 및 협약 이행조치(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예산편성 등 포함)
 - 세출예산 차등(39조) : 지자체간 공동사업, 지역개발계정 시설복합화사업 추진시 예산편성 우선반영 및 지원규모·보조율 차등 지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시설 설치관리 : 지자체장은 광역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협약체결 및 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
 - 사무위탁(151조) : 지자체간 일정 사무를 위탁
 - 행정협의회(152조) : 지자체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조합(159조) : 2개 이상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 분쟁조정(148-150조) : 지자체간 분쟁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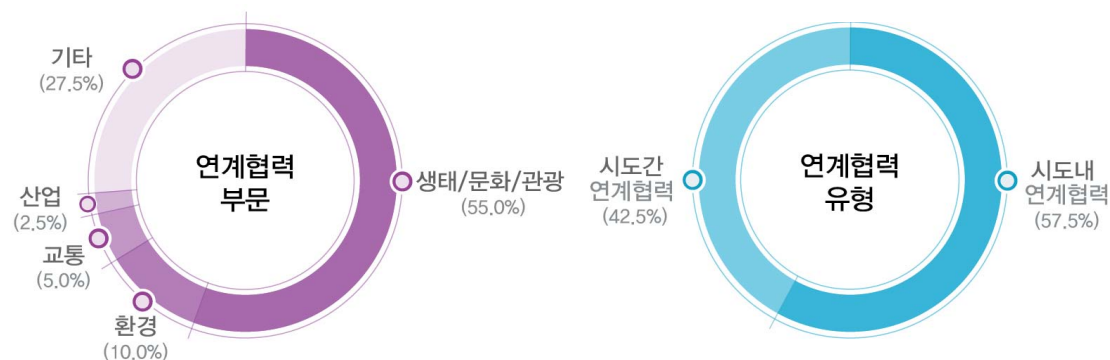
page 6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2.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사례(기초생활권)

● 연계협력사업의 성격과 범위(2010 우수사업 40개)

- 부문 : 생태·문화·관광(55%), 환경(10%), 교통(5%), 산업·R&D(2.5%)
- 유형 : 시·도내 연계협력(57.5%), 시도간 연계협력(42.5%)



page 7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2.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사례(기초생활권)

● 문화관광부문 연계협력 사례

사업명	관련 지자체	사업내용
생태관광 금강연계 사업	부여군 등 6개 시군	· 기추진 : 팸투어 및 금강권 문화제, 관광홍보물·홈페이지 공동 운영 · 신규 : 금강권 대표상품 개발(관광상품, 역사문화 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 홍보마케팅 확대
내포문화 숲길	서산시 등 4개 시군	· 다양한 테마의 길 조성 · 등산로·연결도로 정비, 대피소, 전망대, 쉼터, 표지판 등 조성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영월군 등 6개 시군	· 시군간 패키지 관광상품화, 공동 홍보·마케팅 ※ 일부 사업 자체 추진 등
지리산권 자전거 둘레길	남원시 등 7개 시군	· 자전거 둘레길 159km 조성(기조성 37km, 신규 조성 84km), 자전거 터미널, 휴게시설(7개소) 설치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영월군 등 4개 시군	· 지질자원, 박물관 등 연계 지질관광코스 개발 · 공동마케팅(공동가이드북,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인증제
영산강 History tour	목포시 등 4개 시군	· 나루터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황포돛배 건조, 폭포 설치 · 공동 홍보책자 제작

page 8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2.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사례(기초생활권)

◦ 산업특화부문 연계협력 사례

사업명	관련 지자체	사업내용
북분자 광역클러스터	고창군 등 3개 시군	· R&D(기능성 제품개발, 육종체계 및 재배기술), 마케팅 및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전주시 등 3개 시군	· 한지 문화마을 조성, 한지장인학교 운영,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사과 공동가공제품화 및 농기업 창업 보육	봉화군 등 4개 시군	· 공동가공제품화센터 건립, 공동 R&D 운영 및 공동창업 마케팅 · 명품사과 공동 가공 및 R&D 지원으로 농기업 30개 육성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	정선군 등 3개 시군	· 천연소재인 대마(헴프)를 활용한 제조업, 관광산업 육성 · 헴프 연계 관광산업 육성, 종자 생산, 헴프 1차 가공 및 소재 활용 제품생산

page 9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2.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사례(기초생활권)

◦ 생태환경 및 기피시설부문 연계협력 사례

사업명	관련 지자체	사업내용
광역 화장시설 건립	강진군 등 4개 시군	· 장사시설, 편의시설, 추모공원, 도로 및 주차장, 녹지공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목포시, 신안군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서 사용할 고효율로 생산 으로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	무주군, 진안군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하여 고효율로(RDF) 생산

page 10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3. 지역간 연계 · 협력 관련 사례(광역경제권)

○ 추진배경

- 시도간 분절된 지역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 차원에서 시도간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 지원내용

- 광역경제권내 또는 광역경제권간 2개 이상의 시도의 연계협력사업 지원
- 지원 규모 : 2010년 540억원, 2011년 1천억원
-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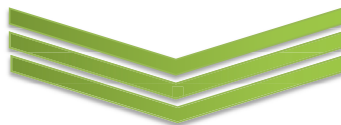
- 지역 일자리·기업투자 확대 프로젝트
- 광역 차원에서의 산업내 가치사슬, 산업간 가치사슬간 시너지 제고사업
- 중앙·지자체·민간 공동 협력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3년)의 지역 역점 사업
- 재정분담 : 국비 50%, 지방비 25%, 민자 25%

page 11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4. 지역간 연계 · 협력 사업의 성공요인

- 개별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상호이해와 신뢰의 기반
- 기존의 네트워크 경제의 존재
- 공동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
-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규모 달성
- 통합적인 접근방식에 의해 범위의 경제 도모
- 다양한 거래비용의 감소
- 지역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의 감소



- **지역간 협력의 근간은 개별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과 사업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 **협력지원을 위한 갈등 회피와 거래비용의 감소노력이 필요하다.**

page 12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5. 지역간 연계 · 협력의 성과

- inter-place based 계획 수립
 - 종래와 달리 중앙 제시적 사업의 지방적 추진이 아니라 시군 지역에 기초한 자발적 사업을 발굴, 기획
- 지역간 협력발전에 대한 시 · 군의 관심 고조
 - 행정구역 단위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간 협력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향상되어 시 · 군별로 지역협력사업의 발굴
- 단체장의 관심 증대
 - 많은 시 · 군에서 (부)단체장이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지역간 협력범위의 확대
 - 우수 연계협력 40개 가운데, 7개 이상의 시 · 군이 관련되는 경우가 15%, 6개가 10%, 5개가 7.5%를 차지
- 사업발굴을 위한 초보적 채널 구축, 가동
- 협약, MOU 등 지역간 협력 증가

page 13

II. 지역간 연계 · 협력관련 제도 및 정책

6.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한계

- 사업발굴의 한시적 추진
 - 시 · 군의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을 추진
- 낮은 수준의 지역간 협력
 - 사업추진을 위한 시 · 군의 조합이나 협의체 구성, 협약 등 보다 높은 협력수준 보다는 담당자간의 협의 단계의 사업이 많음
- 사업의 다양성 및 화학적 협력 부족
 -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문화관광 분야에 편중되고, 지역의 특화자원 활용, 지역산업의 육성 등의 부문은 저조
- 미약한 협력사업 추진체계
 -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연계협력 사업 지원체계 미구축
- 지역간 협력 지원제도 별도 계정의 미비
 - 현재의 시 · 군 발전에 지원되는 재원은 주로 시 · 도 자율배정 및 시 · 군 · 구 자율배정으로 구성

page 14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1. 금강권의 범위

● 금강유역권

- 유로연장 : 395km
- 유역면적 : 9,810km² (남한의 1/10)
- 발원 : 뜬봉샘(飛鳳泉)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 상류지역
- 장수,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보은
- 중류지역
- 대전, 청주, 청원, 연기, 공주, 부여, 논산 (일부)
- 하류지역
- 논산(강경), 서천, 익산, 군산



page 15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2. 지역의 세력권 : 통근통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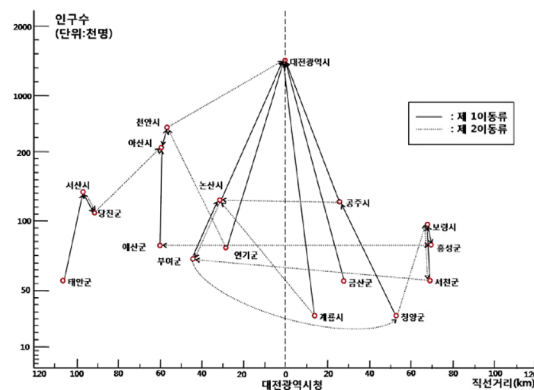
● 금강권 시·군은 대전광역시와 직·간접적 통근·통학권 형성

- 충남의 통근통학권은 4개 권역으로 분석
→ ① 대전광역시 중심 **공주시**, **부여군**, **연기군**, **금산군**, **계룡시**, **청양군** 권역
- ②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권역
- ③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권역
- ④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권역



- 제1이동류는 시와 군간의 이동류, 제2이동류는 군과 군의 이동류로 나타나는데 인접한 시·군이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접한 군간에는 상호유사한 관계를 형성

[통근통학에 의한 대전·충남의 도시계층구조]



자료: 통계청, 2006. 2005 인구총조사 자료: 도시간 통근통학 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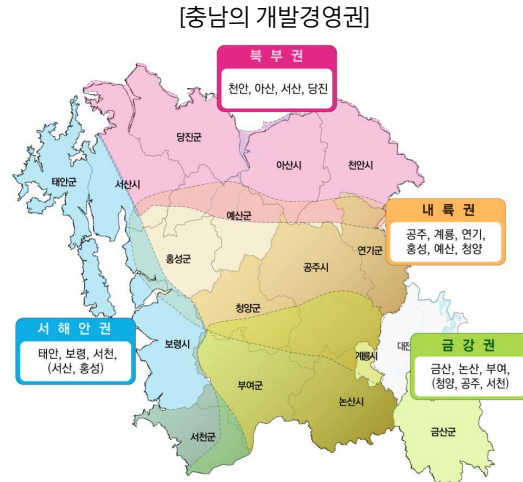
page 16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2. 지역의 세력권 : 경제산업권

○ 4대 개발경영권 기준: 내륙권, 금강권, 서해안권에 해당

- 내륙권: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공주시, 연기군, 청양군 등
- 금강권: 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
→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등
- 서해안권: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세종시의 향만관문
→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등
- 북부권: 한강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거점지대
→ 천안시, 아산시 등



자료: 충청남도, 201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p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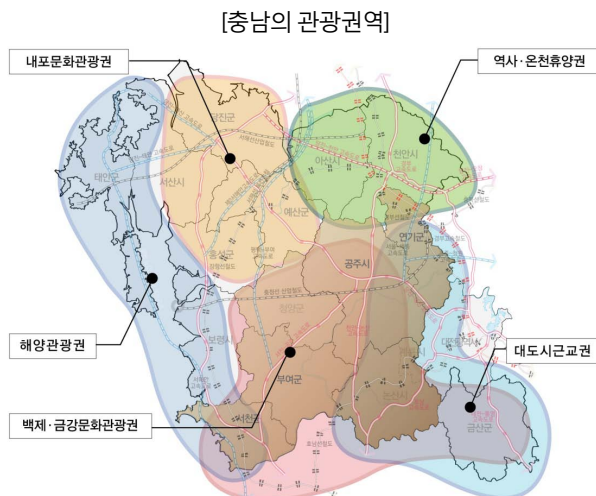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2. 지역의 세력권 : 문화 · 관광권

○ 금강권은 백제·금강문화관광권, 대도시근교권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보유

- 백제·금강문화권 (거점: 공주, 부여)
→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 대도시근교권 (거점: 세종시)
→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 역사·온천휴양권(거점: 천안)
→ 천안, 아산

- 금강변 도시문화권을 백제문화권 뿐 아니라 기호유교문화권까지 포함
→ 금강권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부여
- 금강을 중심으로 유역시·군간 **역사·문화 · 관광회랑**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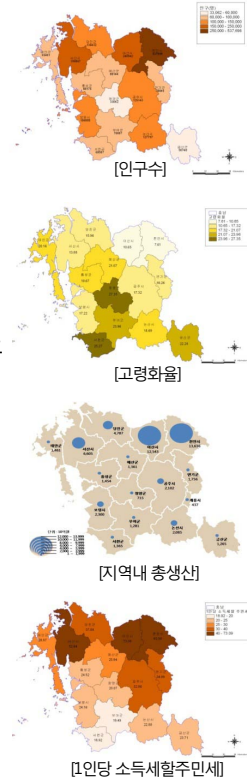


page 18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3. 금강권 현황 및 특성

-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열악한 산업입지 환경
 - 제조업종사자수는 충남의 22.1%, 농가인구 43.3%
 - 제조업 생산액은 충남의 13.8%, 제조업체수 31.8%
- 역사 · 문화 · 경관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 부존자원의 활용은 미흡
 - 금강권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은 미흡
 - 위락·숙박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미흡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화 · 기간산업의 부재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 부족하고, 기간산업 부재
 - 지역발전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체(flagship company)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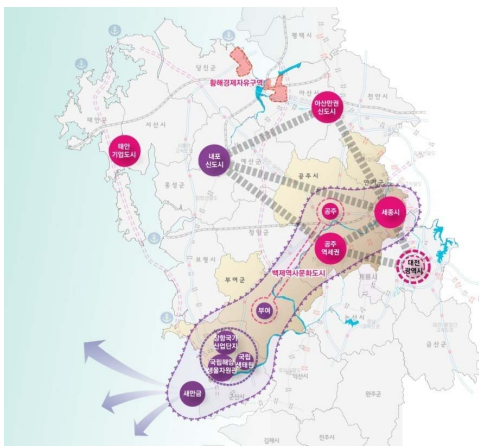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3. 금강권 현황 및 특성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관광지

- 금강권 내 공주역세권, 백제역사문화도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조성
- 금강권 내 지정관광지는 9개소(충남 25개소), '06~'09년간 관광객수는 -2.94% 감소(충남 1.51%)
 - 금강권 내 외국인 관광객수는 동 기간 동안 27.82% 감소(충남 -7.11%)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2011)]

[역사문화·관광자원 분포현황(2010)]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4. 연계 · 협력사업 추진 현황

● 금강 주변 시 · 군이 재원을 마련하여, 관광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금강권 관광협의회가 가장 활발)

-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공주, 부여, 금산, 대전, 무주)
 - 관광객 유치활동, 관광상품개발, 홍보 및 홍보관 운영, 관광안내지도 제작, 캐릭터 공모전 및 개발
-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금산, 영동, 무주)
 - 관광객 유치활동, 관광상품개발, 국내외 홍보, 축제 교류
- 금강권 관광협의회(공주, 논산, 서천, 부여, 익산, 군산)
 - 대표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문화제 개최, 홈페이지 관리
- 생태관광 금강연계사업(공주, 논산, 부여, 서천, 익산, 군산)
 - 생태관광탐방로 조성
- 백제문화제 및 백제 낭만호 운영(공주, 부여)
 - 축제 공동개최 및 관광사업 대행사 선정 및 외국 관광객 유치
- 기타 : 장항선 폐철로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 철새축제 공동개최, 오서산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광역적 장사시설사업을 추진 · 구상 중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연계협력 미흡

- 공주 추모공원 조성사업(논산, 공주, 계룡, 부여)
 -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조경시설, 도로 및 광장
- 심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서천, 보령)
 - 화장로 설치 5기

page 21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4. 연계 · 협력사업 추진 현황

● 특화사업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구상중이나, 실질적 투자는 개별 추진하여 효과 미흡

- 한방약초 가공제품 소비자 안테나숍 구축(금산, 서울)
 - 서울시 등 안테나숍 설치(임대료 및 기반시설 시군 공동투자)
- 한방약초 기능성가공제품 R&D-산업화(금산, 평창, 제천, 진안, 장흥, 안동, 문경, 상주, 산청, 함양)
 - R&D를 통한 기능성 한방약초 제품 개발 및 산업화
 -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조사방법 체계화 포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청양, 홍성)
 - 청양 구기자 농업 + 홍성 가축사업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친환경농자재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조사료 생산가공시설 등
- 서해안권 수산종묘 공동방류(서천, 군산)
 - 이동성 어류 특성상 수산종묘 방류 기피 등에 따른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지남하여 접경수역 수산종묘 공동 방류

page 22

Ⅲ. 금강권의 특성과 연계 · 협력 추진사례

5. 연계 · 협력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연계협력사업의 대부분이 관광사업에 집중, 행정협의회 주도
 - 행정협의회에 의한 관광사업(홍보)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미흡
- 남비시설-입지 기피, 뽕피시설-입지경쟁 심화와 대상 시군의 성과배분, 역할분담관련 협의 부진
 - 남비-뽕피시설 입지를 고려할 경우, 관련 시군은 기피 경향
 - 공동으로 활용하고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의 배분, 역할분담과 같은 실천적 고민과 협의 부족
-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구상,추진 중이나 통합추진조직이 없음
 - 연계협력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천적 논의를 위한 통일된 창구가 없음
 -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道와의 관계에 대한 역할기능이 정립되지 않음
- 연계협력사업이 다양화 · 세분화되지만, 이를 논의하고 공론화 할 창구 미흡
 - 관광행정협의회는 공동분모 도출이 가능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생산-가공-유통-마케팅-연구 등 다분야에 걸친 세부사업을 협의 · 공론화 및 컨설팅 등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및 창구 부족

page 23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1. 금강권의 여건변화

- 세종시 건설과 주변지역간 상생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주·연기지역에 36개 기관(9부, 2처, 2청, 1식, 2위원회, 16개 연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 국가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적시
- 도청이전(내포)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개선
 -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9.9km²)
 -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 호남고속철도 개통 예정
- 새만금 종합개발의 가시화로 관련사업 추진 예상
 - 2020년까지 인구 76만 명(282.9km²)
 - 교통, 산업, 관광 등에서 협력사업의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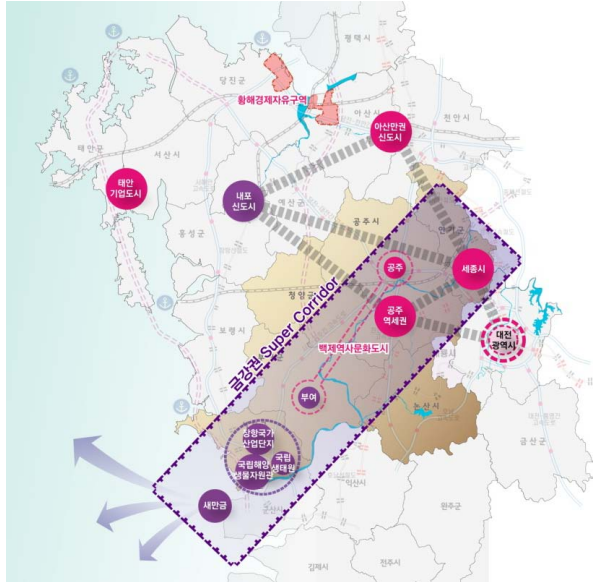
page 24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2. 기본방향

○ 21C 금강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광역복합개발축(Corridor) 형성

- 금강유역공동체를 국토 중남부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설정하여 대통합의 협력적 지역발전을 단계적으로 선도
- 단기적으로 지역 특성자원의 전문화 및 연계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 확보,
내재적 발전역량 강화
 - 전통문화 콘텐츠의 창의적 활용, 체험 문화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광역화, 금강수계 하천환경·경관의 광역관리체계 구축, 교통·물류·산업 연계 강화
- 중장기적으로 내륙의 세종시·대전·청주 등의 광역도시권 연합과
충남의 남부지역, 서해안의 군산·서천·익산·새만금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 문화, 교통, 산업의 축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발전축으로 자리매김



page 25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3. 연계협력사업 접근방향

- 중앙 · 도 · 시군 · 민간 간의 연계 · 협력 방식 별로 사업의 유형화 및 발굴
 - 지방과 중앙 연계협력 : 국가정책상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 국책사업추진시 지역과의 연계·협력
 - 道와 道간 연계협력 : 충남-전북-대전-충북간의 연계협력사업
 - 시군간 연계협력 : 忠南道가 코디네이터 및 컨설팅 역할
 - 행정과 민간간 연계협력 : 사업유형별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사업
- 기존 연계 ·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 보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협의회 중심의 연계협력사업은 실천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및 사업 발굴 추진
 - 필요시, 공동출자형태의 별도 추진조직 구성·운영
- 연계 · 협력 관련사업 선점지역에 대한 인정과 기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 지원프로그램 마련
 - 연계협력시 이해타산 중심의 사고, 배타성 극복을 위해 선점지역(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술선수범, 주도적 구상, 제안, 발의)를 인정하여 과다 경쟁 방지
 - 연계협력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프로그램 동반 수행(필요시 협약 체결)
- 주민의 삶의질 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창출을 고려하여 세부실천사업 우선 논의
 -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므로, 통합추진이 필요
 - 저발전지역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실질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립경제구축과 순환형경제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의 실천 필요

page 26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1.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언(중앙-지방간)

○ 중앙정부 추진사업에의 지역의 참여 기회 부여 및 연계협력 추진

- 배경 : 중앙정부 추진사업은 획정된 부지내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완결성을 중시하는 반면, 그 주변 지역(사회)의 관련사업과의 연계노력은 미흡
예)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산물 홍보판매센터 설치, 국립생태원, 중앙부처 연수원·교육시설의 홍보센터·방문자센터
- 방안 : 국책사업 추진시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및 지역연계사업(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예) 중앙정부 추진사업과 지역의 관련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및 방문자센터의 지역내 입지(서천, 부여) 중앙정부 추진사업 운영시 지역의 식자재 공급 할당 등

○ 물(용수)공급 개선을 위한 협력

- 배경 : 금강권의 핵심인 금강에 대한 물관리 정책은 중앙의 부처별로 제각기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개별부처(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어촌공사 등)의 업무분장과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간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
- 방안 ① 물통합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군간 협의체 구성·운영
②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정확한 규모 설정 및 지역별 배분 계획 수립 /취수 및 배수장 이전 및 개선
③ 금강하구둑의 부분 해수유통 및 통선문 설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page 27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1.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언(중앙-지방간)

○ 금강살리기 사업의 후속 유지 · 관리를 위한 공동 협력

- 배경 : 금강살리기의 핵심사업인 보 조성에 따른 공도교와 주변 생태공원에서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면서 서도, 둔치에 조성되는 생태공원 등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간 서로 떠넘기기
- 방안 ① 하천내 인공조성된 생태공원·시설물, 대체 농경지 리모델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자체가 유지보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 및 인력을 보완 지원(예, 울산 태화강 50억/년)
→ 6개 시군 사업을 연계하여 시설물 관리 등의 광역적 사무로 개편
② 하천내 사유지 보상과 농경지 정리사업은 바람직하나 농민의 생계문제, 농업생산량 감소, 농경지 면적 감소 등에 따른 지역농업의 위축에 대한 대안 마련
(미해결시 해당 시군의 재정 압박 가중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응한 금강권 연계교통망 구축 및 프로그램 준비

- 배경 : 새만금의 토지용도가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로 전환하여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 주변의 군산과 익산은 새만금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및 용수공급의 연계추진을 구상중임
- 방안 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과 익산역간 적정 수송능력 및 배차 분담을 위한 교통수요 창출 공동 구상
② 신교통망 구상 및 계획시 금강권과 연계(광역교통망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③ 새만금 기능 및 시설 확정시 금강권과의 마찰 최소화

page 28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2.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道-道간)

○ 백제문화권내 지역간 광역적 연계 · 협력 강화

- 배경 : 백제문화권은 공주부여익산이며, 현재 익산 역시 백제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각각의 지역을 특성화하는 한편, 상호간 연계협력을 강화
 - 익산 추진사업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익산고도 보존복원, 백제문화 캐릭터 및 스토리텔링사업, 미륵사 복원 사업 등
- 방안 ①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
 - ② 백제고도(古都)보존 사업 공동 대응
 - ③ 역사문화관광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협력

○ 문화권간 광역적 연계협력 및 사업 공동 추진(중원, 백제, 내포, 세종, 기호유교 등)

- 배경 : 공동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동일 지역공동체 또는 생활권 형성임
문화권은 지역의 동질성을 부여하고 공동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이러한 논의는 경제권·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서 자신의 문화를 특성있게 보존하되,
인근의 문화와 연계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방안 ① 중원-백제-내포-(세종)문화권 공동발전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② 기추진중인 문화권 사업들과 구상중인 기호유교문화권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충남-대전-충북)

page 29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3.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 · 군간)

○ 금강권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의 통합 운영 및 기존 조직의 통합화(예, 금강권 발전협의회)

- 배경 :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중인 조직은 금강권 관광협의회(www.geumgangtour.net)이며,
이외에 금강권 관광벨트협의회, 금강권 담양역 공동발전협의회 등 여러 개의 조직이 운영중임
 - 금강권 관광협의회 참여시군 : 공주, 논산, 부여, 서천, 군산, 익산(윤번제 의장)
 - 활동내용 : 홈페이지 유지보수, 워크숍 개최, 홍보부스 운영(세계대백제전, 군산세계철새축제, 강경발효첫갈축제, 부여서동연꽃 축제, 홍원향전어축제, 익산서동축제), 공동관광상품개발(문화관광자원조사, 관광상품개발, 관광객유치방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금강권 팸투어, 달력제작 등
- 성과와 한계 : 광역관광체계 수립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결성(2003)한 이후 관광진흥에 성과
 - 관광과 관련된 맛집, 숙박, 먹거리/특산물 정보, 쇼핑정보, 교통안내 등
 - 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협의(역사문화에서 출발하여 자연생태체험, 문화제로 확대 발전)
 - 기존 자원의 홍보 ·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 및 실질적인 연계·협력은 미흡
- 방안 : ① 현재 금강 중하류 주변 시군 중심 체제에서 금강 전체 시군으로 확대
 - ② 협의회 주도의 공동추진 사업을 발굴 시행(기존 사업과 병행-연계루트 개발 및 공동 추진)
 - 예) 금강 뱃길사업, 문화권 공동 대응 추진 등
 - ③ 협의회 산하 추진조직의 확대 개편(필요시 별도조직화) 및 기능 보완(관광, 지역개발, 도농교류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발굴, 컨설팅, 추진, 의사결정 등)

page 30

IV.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3.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 · 군간)

◦ 금강권 도농교류 통합 정보 · 컨설팅센터 운영(금강권 다지역 관광네트워크)

- 배경 : 지역자원의 활용도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기능적·종합적(package) 접근이 필요
- 농촌공간은 다양한 지역자원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고,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은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또한, 현재 마을 단위 중심의 도농교류정책을 지역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함
예) A마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 경우 B, C마을과의 연계 필요
- 성과와 한계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및 체험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지만,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는 부족
- 2009년 충남 기준, 녹색농촌(71개소), 산촌생태(32개소), 어촌체험(8개소), 전통테마(39개소), 친환경농업체험(8개소), 관광농원(74개소), 농어촌 민박(1,393 개소)
- 방안 : ① 道 차원의 농촌체험 네트워크(충남녹색체험마을협의회)와 연계한 금강권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원 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농촌관광대학 등) 및 컨설팅
②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 품질 관리
③ 금강권의 특성에 맞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농어촌 축제 등)
④ 농산어촌 체험마을 정보의 일괄 제공 및 도시민 요구정보 파악·제공
⑤ 도시농업(urban farm) 자재 및 기술 보급

page 31

IV.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3.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 · 군간)

◦ 특화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 배경 : 지역별 특성화된 향토산업을 목적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나, 유통·판매시장 개척 미흡과 단편적인 육성정책 추진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노정
- 성과와 한계 : 충남은 5개 시군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괄보조금사업 추진
- 향토산업 : 금산(인삼), 부여(굿뜨래 밤), 서천(한산 소곡주), 청양(구기자)
- 향토사업별 참여기업체 : 금산(29개 업체), 부여(2개 영농법인), 서천(한산소곡주), 청양(구기자 조합)
향토산업 외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연구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은 미흡
- 방안 : ① 복합산업화·광역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재배지 확대, 판로개척, 광역협의체 구성 등)
- 특화작목 확대 육성(참·공주부여, 양송이_부여보령, 멜론_부여청양 등)
② 클러스터 조성시 중앙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협의체 구성 및 공동 운영)
- 클러스터 조성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생산, 가공, 체험, 홍보, 마케팅, 연구 등 다분야에 걸쳐며,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또한, 중앙부처는 새로운 분야인 경우(특히, 연구분야), 연구소의 건립 또는 장비기기만을 한시적으로 지원
③ 특화작목에 대한 민·관·학·연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page 32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3.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 · 군간)

● 로컬푸드 공공기관 공급센터 설립 및 운영

- 배경 :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현재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원조례가 마련되고, 광역 및 기초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를 구상 중이나 실현은 미지수
식재료 공급업체의 사익추구문제와 공적 통제의 부재상황이 발생
- 적정 식재료 공급량의 추정 어려움, 품질인증체계 미구축, 거래처 변경, 대규모 자본에 취약
- 성과와 한계 :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원조례의 제정, 공공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실질적인 학교 및 공공급식에 대한 밑그림은 없는 상태
- 사업내용 : ① 학교급식 외에 공공영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구매를 주도(금강권은 공공기관 공급센터에 발주)
- 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선행
② 지역농가들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유도하고, 협력체 또는 단체의 구성
- 공공급식 영역별 급식 수요량,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가격, 위생상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에 맞추어 한 농가에서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몇몇 농가가 함께 생산토록 유도하고, 농민이 쉽게 유통이 가능한 직매소 개설 공간을 제공
③ 지역간 연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에 대한 지역의 수요/공급이 지극히 비대칭적이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편제를 넘어서 '지역'간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

* 로컬푸드의 지역이라는 개념은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가까울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50-100km 정도가 바람직함.

농민의 안정된 소득과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을 보장, 짧은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감소,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지역내부 연결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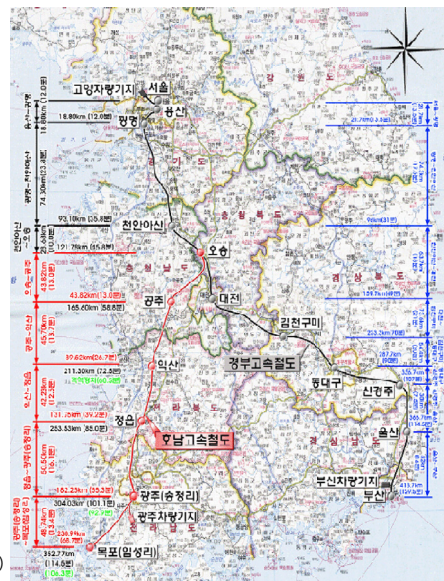
page 33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3.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 · 군간)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배경 : 2014년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는 금강권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자 3대 문화권(백제·고구려·신라)의 관문으로 육성
- 여건 : 초기에는 이용수요 및 경제성이 낮으며, 중앙정부는 역사건설편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역사 입지지역은 비시가화지역
공주역과 인근 지자체간 인프라 구축, 계통시는 미비
- 공주역을 중심으로 공주시 동부(국도 23), 논산시 동부(국도 23호), 부여군 부여읍(국도 40)이 반경 15km내에 위치, 20분내 접근 가능
- 방안 : ① 신성장거점으로서 역세권개발 유도(중앙정부 건의)
② 공주, 논산, 부여 공동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③ 공주역 이용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순회(셔틀) 교통편 제공, 쿠폰제 실시 등



* 호남고속철도 개요

- 노선 : 오송-공주-익산-광주-목포(230.9km) / 사업비 10조 4,901억원(차량비 7,535억원 포함)
- 사업기간 : 오송-광주구간 : 2006-2014년 / 광주-목포구간 : 2006-2017년
- 열차운행 : 총 350량(1편성 10량, 43회, 44회/일 운행)
- 운행시간 : 오송-목포 60분, 서울-목포 : 106분

page 34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4.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시군-민간간)

○ 농수산물 수출 공동 대응

- 배경 :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건강·웰빙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한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여건 : 충남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추세이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충청남도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 2009년 수출액은 413백만불(천안 30%, 부여 20%, 논산 12%순) / 품목별로는 가공식품(41%), 인삼류 23%, 과실류(8%) 순
 - 주요 수출품: 홍삼제품, 배, 고추장, 음료 / 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65%이상 차지)
- 방안 : ① 수출지원 물류시스템 구축 활성화(논산, 부여 중심)
 - 신선채소, 과수에 대한 가격 및 물류비용 절감
- ② 수출 컨설팅 및 정보지원 시스템 공유
 - 수출현장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소, - 수출농가 대상 일반적 기술분야 집합교육 위주의 품목별 컨설팅
 - 파종에서 수출까지 수출상품화 기술중심의 컨설팅 등
- ③ 자율적인 수출전문 조합의 결성운영 및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전문성을 갖춘 수출전문 조합의 결성 및 기존 조합의 노하우 전수
- ④ 수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화 참여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필요(예 : 이스라엘 카멜, 뉴질랜드 제스프리)
 - 김치·인삼 등 가공식품은 업체 자체의 독자 브랜드 확보 / 과실채소류등 신선농산물은 업체간 출혈경쟁, 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품질관리 미흡으로 공동브랜드화 난항

page 35

Ⅳ.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4.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안(중앙정부, 시군-민간간)

○ 폐자원 활용 및 재생사업

- 배경 : 폐기물관리정책은 단순 쓰레기처리(cleaning) 개념에서 재활용(recycle)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최근에는 폐기물의 최소화(waste minimization)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추진 중
- 여건 : 우리나라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은 폐자원 에너지화, 저탄소녹색마를 조성,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로 크게 나뉘며, 각 부처별로 시행 중 충남은 미흡한 수준
 - 소각시설 여열이용(4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19개소), 가축분뇨(공주,청양,홍성), 하수슬러지(당진)
- 방안 : 폐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단 조직 및 민간사업 활성화
 - ① 금강하상의 퇴적 오염슬러지 준설 및 이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생산
 - 오염슬러지의 생화학적 분석을 통한 중금속과 유기물의 분해 및 확산,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 ② 도내 양식 굴폐각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 요업 부자재 등으로 활용
 - 환경오염 폐기물인 굴폐각을 황토하수슬러지를 배합하여 어초제작, 해안방조제, 해안도로포장사업에 재활용
 - ③ 중화학업체의 산업폐기물을 건축자재로 개발·생산
 - 해양투기와 야적으로 문제화된 폐기물을 도로·벽돌 등 건축자재로 재활용, 매립지 확보하여 공장 또는 생태환경공원 조성
 - ④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 농촌폐기물의 65%에 달하는 축산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발효 공법을 적용, 바이오매스로 활용

page 36

IV.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4.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언(중앙정부, 시군-민간간)

○ 농수축산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중앙정부-민간간 연계

- 배경 : 금강권은 낙후지역으로서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부터 시험생산까지 지원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금강권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창출
- 여건 : 충남에는 다양한 형태의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충남동물자원 센터(논산), 인삼약초연구소(금산), 국립생태원(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
- 방안 : ① 성과획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필요(중앙정부 건의)
 - 산발적인 지원정책을 탈피하여, 기초부터 산업화까지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정책 필요
 - 산업화 중심의 응용기술개발 촉진 및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시험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배려
- ② 연구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공단지 조성 및 고부가 수출가공산업 전략적 육성
 - 원료확보, 시험생산(incubation), 인프라 및 정보 네트워크의 일체화
 - 국내외 수출입 및 가공 등 일괄처리 시스템 적용
- ③ 바이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 도입·지원
 - 혁신역량 집적화(기구설립,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관 유치)
 - 연계협력 시스템 활성화(원천기술 산업화 촉진, 기능별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및 연계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촉진)
 - 기업 혁신역량 강화(기업경영지원시스템, 국내외 마케팅 역량강화, 기술제품개발 역량강화)
 - 전문기업 창출(창업촉진, 역외기업 유치·집적화, 고부가가치화 사업전환 촉진)

page 37

IV. 금강권의 연계 ·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4-4. 연계협력가능 사업 발굴 및 제언(시군-민간간)

○ 금강권 자전거 교통시스템의 공동 대응

- 배경 : 금강살리기사업에 의한 자전거도로 조성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향후 금강권에는 광역순환버스와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
- 여건 : 자전거도로는 일정부분 개설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S/W는 전무한 실정
예) 자전거이용 관광객이 시 · 군경계를 넘으면 자전거 반납을 위해서 다시 회귀(?)
- 방안 : ① 자전거 대여사업의 공동 추진
 - 구분 : 시가지내에서 운행되는 대여, 외곽의 농촌 및 산악 등 위락용 자전거 대여, 금강을 따르는 관광용 자전거 대여
 - 공공 : 자전거도로의 확충, 자전거 정류장(bike station)의 장소만 제공
 - 민간 : 자전거 및 정거장 설비, 운영과 관리 담당
- ② 자전거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태양광발전 전기 판매 수익, 광고수입으로 충당
 - 자전거 이용회원 모집, 자전거 보험, 자전거 등의 교통시설 입석간판 등을 이용한 광고수입 충당
 - 자전거길에 솔라캐노피를 설치, 지붕에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생산

page 38

V.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전환 및 협력의 경험을 학습토록 유도

- 단기적으로는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지역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소규모사업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

○ 연계협력사업 관련 추진체계의 개편(상시 소통창구 마련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음
-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道 단위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컨설팅 기능 제공이 필요함(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 더불어서, 개별 연계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의 확대개편이 필요

○ 연계협력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수단의 안정적 확보

- 연계협력사업의 분야는 국고보조와 광특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임
- 자율적인 연계협력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예, 분담률 상향 조정, 별도의 연계협력사업 지원 계정)
- 정부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 필요

page 39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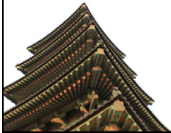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군 연계발전 전략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

03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연계발전 전략

2011.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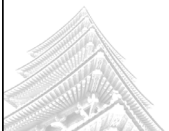


최인호
관광학 박사 / 교수
청운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enochoi@chungwoon.ac.kr



목차

1. 연계전략 이해
2. 관광여건 분석
3. 연계전략 구상
4. 추진 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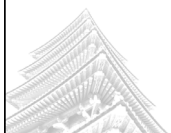




1. 연계전략 이해

01. 배경 및 목표

02. 공간범위 설정



01. 배경 및 목표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의 중요성 증대

- ◎연계, 협력, 귀촌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성 대두
- ◎도정과 금강권 발전의 정책적 접점 발굴 필요

백제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권 조성

- ◎광역권 개발전략사업으로서 문화권에 대한 관심 증대
- ◎백제역사와 금강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권 조성 필요

기존계획의 계승과 신사업 발굴 요구

- ◎금강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원칙 제시
- ◎미래지향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백제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계형 관광활성화 전략 제시**



02. 공간범위 설정

국토종합개발계획 4차 계획 수정계획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충청남도 문화산업비전 2020



백제 비단길 관광권



2. 관광여건 분석

01. 주요 관광자원

02. 지역별 관광객



01. 주요 관광자원

구분	자연자원	인문자원	시설자원
공주시	계룡산, 태화산, 월성산, 매봉산	공산성, 무령왕릉, 갑사, 동학사, 신원사, 영평사, 우금치전적비, 황새바위 천주교도 순례지, 백제문화제	국립공주박물관, 석장리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충남산림박물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청양군	칠갑산, 천장호, 지천구곡	장곡사, 모덕사, 우산성, 서정리9층석탑, 줄무덤, 장승문화제	칠갑산천문대, 고운식물원
부여군	부소산, 만수산자연휴양림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궁남지, 정림사지, 백제왕릉원, 수북정, 성흥산성	백제역사재현단지, 국립부여박물관, 서동요관광지, 백제요
연기군	운주산, 고북저수지, 감성리백로서식지	연화사, 비암사, 서광사, 황룡사, 운주산성	베어트리파크, 연기향토박물관, 뒤웅박고을, 교과서박물관
논산시	노성산, 탑정호	관촉사, 개태사, 돈암서원, 노성산성, 명재고택, 계백장군유적지, 딸기축제	강경젓갈타운
서천군	신성리갈대밭,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 천방산, 춘장대해수욕장	성북리5층석탑, 건지산성, 서천읍성, 이상재선생생가, 한산모시, 소곡주	한산모시관, 조류생태전시관

02. 지역별 관광객



구분	총계	계	유료관광지 관광객수		무료관광지 관광객수
			내국인	외국인	
공주시	3,062,746	2,653,062	2,629,795	23,267	409,684
청양군	1,284,635	113,275	113,237	38	1,171,388
부여군	4,782,229	1,646,970	1,545,808	101,162	3,135,259
연기군	814,640	814,640	814,441	199	678,798
논산시	1,432,691	307,520	306,582	938	1,125,171
서천군	4,120,113	221,213	221,213	-	3,898,900

3. 연계발전 구상

01. 비전 및 목표

02. 연계발전 구상

01. 비전 및 목표

살아있는 백제문화의 정수가 흐르는

비전

백제 비단길 관광권 구현

방향

소통

보존

혁신

융합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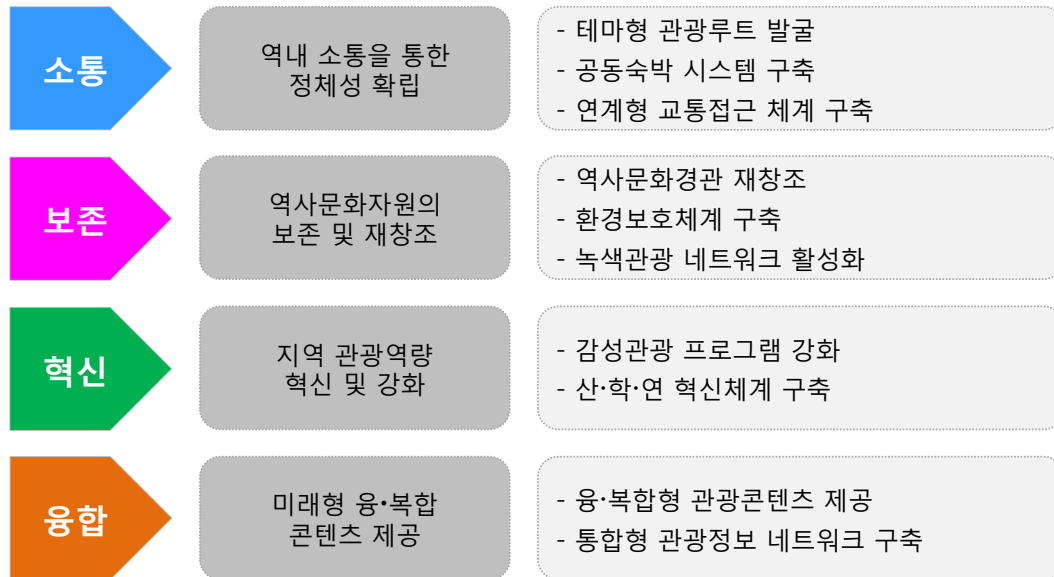
역내 소통을 통한
정체성 확립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재창조

지역 관광역량
혁신 및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공

02. 연계발전 구상



백제 비단길 관광권의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전략추진

4. 추진 전략사업

01. 테마형 관광루트 발굴

- 백제 비단강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테마별 관광루트 개발
- 상호연계성 추구 → 관광객 분산효과, 지역특성화 도모
- 문화탐방로, 문화가도, 역사가도 등



02. 공동숙박 시스템 구축

- 공동숙박 브랜드 개발 → '백제 비단강길 스테이(가칭)'
- 숙박품질 기준 마련 → '백제비단강길 스테이 스탠다드(가칭)'
- 공동숙박 관리시스템 → 회원DB 구축, 온라인 공동예약 시스템



03. 연계형 교통접근 체계 구축

- 공동 교통이용권 개발 → 백제 비단강길 프리패스
- 내륙형 바이크 루트 개발 → 지역의 농촌문화자원 활용



04. 역사문화경관 재창조

- 역사문화 풍경가도 개발 → '백제 비단강길 풍경(가칭)'
- 근대역사문화자원 명소화 → 'Retro 백제 비단강길(가칭) + 강경(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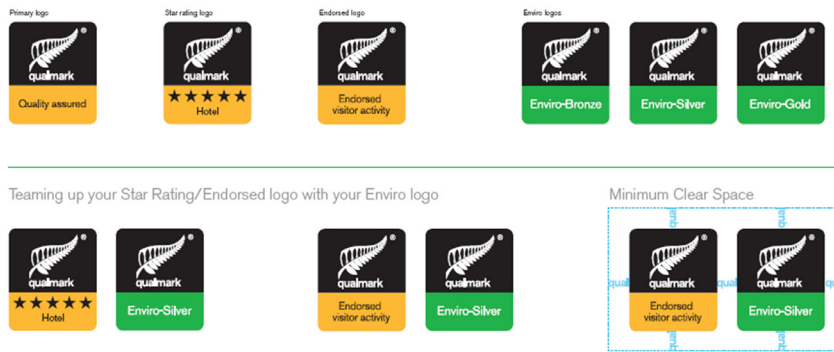
근대문화유산 분포 → 공주(38) 논산(77) 금산(27) 연기(14) 부여(25) 청양(25)



05. 환경보호체계 구축

- 환경보호원칙 마련 → 백제 비단강길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조례 제정
- 환경보호 모니터링 → 백제 비단강길 환경지킴이

Qualmark®
Brand standards for basic elements



06. 녹색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 녹색관광 협의회 구축 → '백제 비단강길 그린 트러스트(가칭)'
- 유휴 녹색공간 재생산 → '빈집 관광 프로젝트' (빈집 대여 프로그램)



07. 감성관광 프로그램 강화

- 감성역량지수 강화 → '백제 비단강길 감성관광 스쿨(가칭)'
- 공감형 관광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 대상



08. 산·학·연 혁신체계 구축

- 지역관광 명인 발굴 → '백제 비단강길 명인(가칭)'
- 지역관광 공동 캠페인 → '백제 비단강길 매력 체험' 캠페인



09. 융·복합형 관광콘텐츠 제공

- 가상형 엔터테인먼트 제공 → 백제 비단강길 4D 체험관
-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 → 캐릭터 + 전통, 생활, 첨단, 친환경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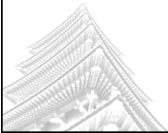
10. 통합형 관광정보 네트워크 구축

- 실감형 관광안내정보 제공 → 백제 비단강길 앱
- 관광안내소 브랜드화 → 백제 비단강길 안내센터
- HCC(Host Created Contents) 생성 활성화 → 지역관광 리포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